

광주시, 추경 5670억 편성...시민생활 안정·미래 기반 설계

기정액 대비 7.0% 증가 8조6561억 규모...시의회 제출 소비쿠폰·모빌리티AX 실증랩·호우피해복구 등 반영

광주시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5670억원을 편성해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으로 광주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8조891억원 대비 7.0% 늘어난 8조6561억원이 된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 기조에 발 맞춰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고물가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소비 촉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회복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368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56억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15억30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9억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5억900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1억8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서민 가계 부담 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AX실증랩 구축 10억원,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사전기획연구 1억5000만원, 피지컬 AI기반 미래차산업 혁신클러스터 기획 4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 대응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호우피해 응급복구 10억원, 호우피해 재난대책 204억원, 집중

호우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2억1000만원, 전통시장 전기·가스설비 복구 지원 700만원 등을 포함했다.

시민토론회를 통해 추진 의지를 밝힌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217억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예산(9억8000만원)도 편성해 시민편의 향상과 교통복지 확대에 나선다.

이병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회 추경은 정부 추경 방향에 부합하는 민생 회복 중심 예산으로, 시민의 삶을 안정시

키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의 시비 매칭분에 대해 세출구조조정과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연말 정리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면 ‘국감 현장’서 계속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에 대해 투자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설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보조금의 대부분은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집중됐다.

하지만 신·증설 지원 건수 역시 지난 2020년 64건, 2021년 68건, 2022년 57건, 2023년 53건, 지난해 53건, 올해는 8월 말 현재 22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5극 3축 전략을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 북평면 남창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추가 공모에서 해남군 북평면 남창지구가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마을의 유허시설과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된 공간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조성해 농촌의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전남도는 올해 세 차례 공모에서 영암군 도포면 성산지구, 신안군 팔금면 팔금지구, 나주시 세지면 대산지구가 선정되며 국비 12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누적 국비는 140억원에 이른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오후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공유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 SRF분쟁...국회, 중재법 개정 착수

박군택 의원 대표발의...향교 허용·2배 초과 증액 금지

광주 자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둘러싼 2100억원대 운영비 분쟁을 계기로 국회가 불합리한 현행 중재법 개정에 발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군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공공기관 관련 중재에서의 과도한 청구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자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 관련 중재 사건에서 청구 금액이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공공기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 사

건에 한해 중재신청금액 변경(증액) 시 당초 합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최초 신청금액의 2배 초과 금지, 증액 청구에 대한 충분한 방어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재판정부 권한에 대한 이의신청에 불복해 법원에 권한심사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항고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심리 및 중재판정 요지를 국가안보나 영업비밀 보호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고, 법원의 권한 심사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했다.

박 의원 등 15명의 공동발의 의원은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SRF시설 관



련 중재 사건에서 당초 78억 원이던 중재신청금액이 절차 중 2천100억 원으로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중재합의 당시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중재사건은 국민 세금이 직접 투입되지만, 중재 절차 진행 경과나 판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민주적 통제와 사후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중재판정부의 권한 다툼이 청구 금액 과도한 증액에 대한 견제장치 부족해 공공기관이 불리한 조건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위험이 크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2일부터 광주택시 기본요금 4800원

주행거리 100원당 134m→132m 조정...심야할증 차등 적용

광주시는 최근 택시 운송비용 상승과 인근 시·도의 요금 수준, 업계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9월 2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인상률 13.35%) 및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이며 품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km 4300원에서 1.7km 4800원으로, 거리요금은 기존 134m에서 132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요금은 32초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심야할증은 현행 24시부터 04시까지 일괄 20% 적용되던 것이 23시부터 24시는 20%, 24시부터 02시는 30%, 02시부터 04시는 20%로 차등 적용된다.

시계외할증은 기존 35%를 유지하되, 나주·담양·장성·함평 등 인접 시·군에 한해 40%로 인상된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2km 5100원에서 1.7km 54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6m에서 149m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23시부터 04시까지 20%)과 시계외할증은 20%가 새로 도입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서삼석 “섬·산간에도 ‘긴급출동서비스’ 적용”

손해보험협회, 섬 지역 경정비 장비지원·교육 병행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키로 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3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KB손보, DB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

해 검토한 적이 없었으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의원실과 5대 손보사는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한화손보가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내년 1월, 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은 내년 9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5대 손보사의 결단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안전보습 몬스타수분 추추추

TONYMOLY®
street culture

EWG Green 등급 원료 처방
순도 100% 발효녹차 사용

THE CHOK CHOK
GREEN TEA
Watery Cream
촉촉 수분 · 자연 발효 녹차

CONTAINS 100 % PURE
GREEN TEA FERMENT EXTRACT
Instead of distilled water
TONYMOLY

토니모리 더촉촉 그린티 수분크림